

유럽연합은 와해될 것인가

Jean Monnet, *Memoirs* (New York: Doubleday & Company, 1978). 박제훈·옥우석 역, 『장 모네 회고록』(서울: 세립출판, 2008).

Andrew Moravcsik, *The Choice for Europe: Social Purpose and State Power from Messina to Maastricht*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98).

Larry Siedentop, *Democracy in Europe*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1).

Jan Zielonka, *Europe as Empire: The Nature of the Enlarged European Un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6).

김남국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최근 계속되는 글로벌 경제위기와 함께 유럽연합의 앞날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그리스의 재정 적자 문제에 이어 이탈리아까지 경제 위기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자 유럽연합의 운명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등장하고 있다. 그 의견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유럽 통합이 회원국들 사이의 차이를 무시한 채 너무 빠르고 깊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후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현재의 위기가 불완전한 통합에서 유래하고 있기 때문에 더 높고 깊은 단계의 통합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전자의 의견에 따르면 재정 적자와 경제정책 등에서 부담이 되는 일부 국가의 유로존(euro zone) 탈퇴를 전제로 통합의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고, 후자의 의견에 따르면 현재의 위기가 재정정책(fiscal policy)의 통합으로까지 진전되지 않아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회원국의 재정정책에 대한 완벽한 통합만이 유럽연합을 구원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서로 다른 의견을 표명하는 과정에서, 일부 학자들은 문제가 된 그리스 등의 정책 담당자들을 부패와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회부하여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이들이 고의적으로 숫자를 조작하거나 속이면서 자신들의 능력을 뛰어넘는 재정 지출을 단행하고, 그 적자의 부담을 회원국들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현재의 위기 상황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와 같은 갈등은 유럽 통합의 초기 단계에서도 그 사례를 찾아 볼 수 있다. 특히 재정 정책을 포함한 더 완전한 통합의 주장은 초기 단계에서 장 모네(Jean Monnet)를 비롯한 유럽의 엘리트들이 보여준 견해와 맞닿아 있다. 1950년대 초반 1, 2차 세계대전을 거친 유럽은 또 다른 세계 전쟁을 막아야 한다는 절박한 필요를 느끼고 있었다. 이러한 절박함에 공감하는 사람들에게 유럽 통합은 무엇보다도 인간의 이성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이성의 기획을 통해 인류를 전쟁의 불행으로 몰고 가는 광기와 우연을 통제하려는 시도였다.

아마도 20세기 역사에서 이성의 기획을 극단적으로 밀어부친 첫 번째 사례가 러시아 혁명이었다면 두 번째 시도는 유럽 통합이었을 것이다. 러시아 혁명이 동요하는 시장의 무정부성과 인간의 이기심마저도 인간의 기획을 통해 봉쇄할 수 있다고 믿었다면 유럽 통합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전쟁의 가능성을 이성의 기획과 제도적인 협력을 통해 봉쇄할 수 있다고 믿었다. 두 사건 모두 역사의 우연을 통제할 이성의 힘과 그 힘에 근거한 정치적 지휘부(control tower)의 구축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오늘날 재정 정책까지 포함한 더 완전한 통합을 대안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의 계보를 유추해 볼 수 있다.

유럽연합의 초기 역사에서 통합의 아버지로 일컬어지는 장 모네의 『회고록』은 이러한 입장의 기원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그는 전쟁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존재하고 이는 상상력을 통해 극복되어야만 한다고 믿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유럽은 다시 전쟁에 직면하지 않을 수 없다는 근심에서 출발하여, 그는 너무 늦기 전에 프랑스와 독일을 연결시키고 양국 간 공동의 이익을 반영하는 협력의 틀을 만들어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자르 지방의 석탄·철강을 공동 관리하는 슈망선언(Schuman Declaration)을 통해 유럽석탄철강공동체를 탄생시킨 그의 노력은 이성의 기획을 통해 성취해 낸 위대한 업적이었다. 그는 사람 없이는 아무 것도 가능하지 않고 제도 없이는 아무 것도 지속될 수 없다고 믿었다. 방해물은 오직 우연의 결과가 있을 뿐이지만 그 우연조차도 몇몇은 예측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우리가 정밀하게 만들어낸 규칙이나 제도가 제대로 작동한다면 갈등하는 국가 사이의 긴장 요소를 제거하고 우연의 방해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은 것이다.

기획의 힘에 대한 장 모네의 신념의 근원은 1차 대전의 경험으로까지 소급된다. 그는 1차 대전 당시 연합군 집행위원회에서 일하면서 전체주의 공격에 저항하는 자유 진영의 모든 힘을 한데 모아 통합하는 임무를 수행했다. 2차 대전 중이던 1939년 11월부터는 영불 조정위원회 의장으로서 어떻게 가용 자원을 추정, 배분하고 비용을 균형 있게 나누는가에 대해 고민하였다. 그는 이 과정에서 인력과 보급품, 선박을 공동 관리하면서 자원을 가장 합리적인 사용처에 투입할 수 있는 공동 조직체의 필요성에 대해 주장하였다. 동맹국들이 단일한 조직체를 형성하지 않은 채 개별적으로 전투를 수행하면 전투의 결과는 불투명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1940년 6월에는 처칠에게 편지를 보내 프랑스와 영국의 공군력 통합을 제안하기도 했다.

코냐 지방의 포도주 도매상의 아들이었고 일찍이 대학교육을 받지 않은 채 사업에 뛰어들었던 모네는 면밀한 대차대조표를 통해 전쟁 중 영불의 공동 전선 필요성을 주장했고, 전후에는 프랑스와 독일을 유럽 통합의 틀 아래 묶는 것이 제3의 전쟁을 막는 최선의 길이라는 신념으로 강력하게 유럽 통합을 주장하였다. 1950년대에 장 모네가 유럽에서 또 다른 전쟁의 가능성을 제도의 기획을 통해 봉쇄하고자 했다면, 오늘날 일부 학자와 정책 결정자들은 글로벌 경제위기를 몰고 오는 신자유주의적 시장 경제의 부정부성을 더 완전한 재정 통합이라는 또 다른 기획을 통해 극복하고자 한다. 당연히 이들의 선택은 통합으로부터 후퇴가 아니라, 이성과 과학의 힘에 근거한 근대의 대표적인 프로젝트로서 유럽 통합의 더 높고 깊은 진전일 것이다.

옥스포드대학교의 교수인 얀 지에론카(Jan Zielonka)의 책 『제국으로서 유럽』은 단일한 공동체로서 완전한 통합을 꿈꾸는 모네의 주장에 대한 반론의 성격을 갖는다. 지에론카는 신중세 제국(neo-medieval empire)이라는 개념으로 유럽연합의 발전을 설명하면서 이를 웨스트팔리아 체제의 중앙집권적 국가인 또 다른 유럽 연합의 모습과 대비시킨다. 즉, 그의 신중세 제국 개념은 수평적이고 다원적인(plurilateral) 거버넌스(governance) 체계를 갖는 유럽연합의 현실을 설명하는 개념이자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청사진이기도 하다. 이러한 방향으로의 발전은 특히 동유럽 지역으로 유럽연합의 회원국이 확대되면서 그 경계가 확장되는 과정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유럽연합의 경계 확장은 기존의 위계적이고

경직된 거버넌스 체계로 감당할 수 없는 새로운 충격을 가져오고 있다. 지에론카에 따르면, 분권, 위임, 탈집중화 현상은 미국, 중국, 일본, 인도 등의 거버넌스 체계와 비교할 때 유럽연합이 보여주는 독특한 경험이자 특징이다.

경계의 확장은 또한 불가피하게 다층과 다중심의 거버넌스를 만든다. 유럽연합은 규범 권력이자 시민 권력으로서 동의와 외교적 협상을 통해 그 영토를 넓히고 있지만 외교와 국방의 핵심은 여전히 회원국의 손에 있다. 지에론카는 이것이 분권화를 특징으로 하던 중세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주장한다. 즉, 동유럽으로의 경계의 확장 과정은 거대한 다양성의 불가피한 수용과 함께 유럽연합을 새로운 중세가 부활하는 모습으로 바꾸고 있는 것이다. 지에론카는 이러한 신중세의 유럽이 유연하고 변화하는 경계, 사회경제적 차이가 일정한 유형 없이 지속되는 상황, 다양한 문화 정체성의 공존, 권위의 배분과 기능적인 능력 및 물리적인 지역구의 불일치, 정치적 단위와 충성심의 상호 교차 침투, 유럽 내의 중심과 주변 개념의 희석화, 초국가 네트워크 사이에 서로 다른 유형의 연대에 근거한 재분배, 서로 다르게 규정되는 권리와 의무를 갖는 시민권의 분화, 중첩된 군사 및 정치 기관, 서로 다른 기능과 영토의 경계를 따라 분화된 주권 등의 특징을 갖는다고 본다.

그렇다면 이렇게 분권화된 신중세 유형의 제국에서 어떻게 정당성이 확보되고 민주주의가 작동할 수 있을까? 복잡하고 다원적인 수평적 거버넌스 체계는 중층적인 정체성을 양산해 내고 그 정당화의 기제는 민족적 애국심보다는 헌법적 애국심에 근거할 것이다. 또한 유럽연합은 지역과 회원 국가 수준에서 활발한 참여를 필요로 하고 새로운 형식의 대표 및 책임의 방식을 찾아야 할 것이다. 민주주의도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지에론카는 히르쉬만이 제시한 참여와 탈퇴의 개념을 적용하여 웨스트팔리아 체제와 신중세 제국의 특징을 구분하고 있다. 즉, 웨스트팔리아 체제가 경계의 확정을 통해 정권을 바꿀 수 있는 참여의 권리를 보장한다면, 신중세 제국으로서 유럽연합은 주어진 정권으로부터 탈퇴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분산되고 다원화된 권위의 체계로 구성된 유럽연합의 체제는 권한의 분산 및 견제와 균형을 보장할 것이다. 물론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의사결정 과정의 비효율성이 문제일 수 있지만, 그것은 중국, 미국과 비교할 때 유럽연합만이 보여주는 독특한 민주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지에론카는 이러한 특징을 갖는 유럽연합의 발전 방향을 무시한 채 단일한 거대 국가로서 중앙집권화된 웨스트팔리아 체제를 재생산해 내는 것은 올바른 유럽연합의 선택이 아니라고 본다. 즉, 완전하게 통합된 재정정책과 외교안보 정책을 갖는 단일 거대 국가는 유럽연합이 갖는 규범권력으로서 독특한 특징을 무시하고 평화를 향한 새로운 실험으로서의 역사적 의미를 반감시킨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다층적이고 다원적이며 동시에 수평적인 제국의 형태를 유지하는 것이 유럽연합의 원래 목적과 의미에 충실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지에론카는 현재의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더 깊은 통합으로의 진전보다는 회원국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유럽연합의 후퇴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앤드류 모라브치(Andrew Moravcsik)의 책 『유럽을 위한 선택』은 유럽 통합의 수준과 속도가 장 모네 식의 연방주의적 신념이나 경제 중심의 교류 확산을 통한 기능주의적 확산 효과의 결과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또한 정치지리적 위협이나 국제기구의 정치적 역할, 유럽 비전을 공유한 관료들의 노력 역시 부차적인 요인에 불과하다고 본다. 모라브치에 따르면 현재의 유럽 통합 수준은 순전히 프랑스와 영국, 그리고 독일의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국가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일련의 합리적인 선택을 한 결과이다. 이른바 자유주의적 정부간주의(liberal intergovernmentalism)라고 불리는 그의 이론에 따르면, 현재 수준의 유럽 통합은 국가선호의 형성, 국가 간 협상, 그리고 국제기구로의 주권 이양을 둘러싼 결정 등 3단계로 구성된 집합적 의사 결정 과정에서 각국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선택을 한 결과의 총합인 것이다.

국가선호의 형성은 사실상 국내 이익집단의 경제적 이익에 근거한 압력과 제약 속에 이루어지고 국가는 이러한 이해를 국제 무대에서 협상을 통해 대표한다. 즉, 모라브치가 보기에 국가 이익은 주로 경제적 이해에 근거한 국내 정치로부터 구성된다. 따라서 모라브치는 드골(Charles De Gaulle)이 영국의 유럽경제공동체 가입을 거부한 이유가 위대한 프랑스의 자존심 때문이 아니라 프랑스의 밀가격에 미칠 영향 때문이었다고 주장한다. 국가선호의 다음 단계인 국가 간 협상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비대칭적 상호의존의 결과 개별 국가의 힘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다. 즉,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나 유럽의회 등의 초국가 기

구는 실제 통합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하지 못했고 영국, 프랑스, 독일의 국가 이익을 위한 합리적 선택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최종 단계인 국제기구의 구성 혹은 강화 역시 사실상 국가 간 협상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상호 간 협력을 약속하기 위해 회원국들이 주권을 위임하고 공유할 것을 선택한 결과이다. 다시 말하자면, 유럽연합의 기구들은 회원 국가 사이의 불확실하고 불복할 가능성이 높은 의제들을 연계하고 타협시키는 역할을 맡기 위해 회원국들의 위임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결국, 모라브칙에 따르면 유럽 통합의 역사에서 주요 결정들은 초국가적 기구들의 역할 때문이 아니라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주요 국가들의 이익과 선호를 반영하여 이뤄진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국가선호는 국가 안보나 정치인의 비전보다는 국내의 경제적 이익을 반영하여 주로 형성되었다. 따라서, 최종적인 협상의 결과는 회원국의 상대적인 협상 능력을 반영한 것이고 유럽연합의 기구로 정책 결정을 위임한 것 역시 협상의 결과에 승복하게 만들기 위해 회원국들 자신의 희망을 반영한 것이다. 즉, 유럽 통합은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국가 지도자들의 일련의 합리적 선택으로 가장 잘 설명될 수 있고, 영국, 프랑스, 독일이 자신들의 경제적 국가 이익을 극대화 하기 위해 선택을 한 결과가 오늘날과 같은 수준의 유럽 통합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모라브칙은 유럽 통합의 역사에서 대표적인 5대 사건, 즉 로마 조약, 공동농업정책, 유럽통화체제, 단일유럽 조약, 마스트리히트 조약 등을 검토하면서 자신의 자유주의적 정부간주의 이론을 구체화 한다. 그러나 그의 이론은 유럽 통합의 중대한 역사적 계기가 되었던 사건이나 국면을 설명하는 데는 뛰어나지만, 일상적인 유럽연합의 작동을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를 보인다는 비판을 받는다. 모라브칙의 이론에서 합리적 행위자 모델을 따르는 국가는 자신의 목표를 성취할 가장 적절한 방법이 무엇인지 알고 항상 합리적으로 선택한다고 전제되지만 국가가 이처럼 단일한 행위자로 간주될 수 있는가도 의문의 대상이다. 국가는 오히려 수많은 조직의 이익이 경쟁하고 갈등하는 과정 속에서 복합적이고 변화하는 이익을 대표해야 하는 분열되기 쉬운 행위자이다. 또한 단일한 합리적 행위자로서 국가에 초점을 맞추는 모라브칙의 논의에서 비정부 행위자나 정책 결정자의 역할은 과소평가된다는 점도 주요 비판의 대상이 된다.

만약 모라브치의 주장처럼 유럽 통합이 주요 국가들의 경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합리적 선택의 결과라면 오늘날 유럽이 직면한 경제 위기의 다음 장면 역시 영국, 프랑스, 독일의 국가 이익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가를 추론한 후, 이에 근거해 각국이 선택할 다음 수순을 예측할 수 있다. 예컨대, 프랑스는 더욱 완전한 재정 통합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고, 영국은 유럽연합 23개국이 찬성한 재정 개혁안에 서명하기를 거부하고 있다. 영국은 종종 독자적인 노선을 선택하면서 독일과 프랑스를 위협했지만, 영국의 경제적 이익집단들이 영국 정부의 결정을 지지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그 위협의 영향력이 달라져 왔다. 현재 영국의 선택 역시 프랑스와 독일의 금융규제 강화 및 재정 개혁 주장에 대해 영국의 주요 경제 집단들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 그 위협의 영향력이 달라질 것이다. 반면 큰 틀에서 프랑스와 이익을 함께 하던 독일의 태도 변화는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독일의 경제적 이익집단들은 그리스 등의 재정 적자 부담을 떠안는 것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나타내면서 재정을 통합하자는 프랑스의 주장에 망설이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왜 프랑스나 독일의 시민들은 그리스나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정부가 보여준 정책 실패에 대해 비판적이고, 그 결과를 함께 책임지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낼까? 더 나아가서 심지어 이들 나라의 정책 담당자들을 재판에 회부하여 부패와 사기 혐의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할까? 래리 시덴탑(Larry Siedentop)의 『유럽의 민주주의』는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제시하고 있다. 시덴탑에 따르면 유럽의 민주주의는 기업의 경영처럼 소비자의 선호를 조작하는 정치 엘리트들 사이의 경쟁으로 축소될 위험에 처해 있다. 유럽 통합 과정에서 배타적인 경제적 용어들의 폭정 아래 민주적 책임성이나 권한의 분산과 같은 정치적 가치들은 희생되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사람들은 시민의 권리보다는 경제적 성장에 더 관심을 갖는다. 모든 법의 지배는 대중의 습관과 태도에 기반할 때 안정적으로 지속 가능하지만 유럽연합이 기획하는 법의 지배와 합의의 문화는 정치 엘리트들의 주도 아래 중앙집권화를 추구하면서 대중과 멀어지고 있다.

자신들이 속한 정치 공동체에 충성심을 갖고 동료 시민들에게 연대감을 갖는 유럽 시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민주주의의 결여는 오늘날 유럽연합이

당면하고 있는 핵심적인 문제이다. 내가 전혀 연대감을 전혀 느낄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다른 나라의 정치 엘리트가 내린 정책 결정의 실패에 함께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오늘날의 유럽인 것이다. 시덴탑은 몽테스키외의 예를 들어 직접민주주의가 불가능한 근대의 정치 상황에서 민주주의를 유지할 수 있는 두 가지 가능한 경우를 제시한다. 지방의 자율성과 권위에 대한 존경이 보존되던 귀족 정치가 그 한 경우라면 다른 하나는 법의 권위는 집중화되지만 권력은 분산되는 영국의 정치체제다. 그러나 유럽 사회는 자본주의의 발달과 계급 정치의 등장으로 정치의 영역이 단일 기준으로 재편되면서 지방의 자율성과 권위의 분산이 사라지고 중앙집권화된 단일한 정치 체제가 등장하게 되었다. 몽테스키외는 이런 과정에서 유럽 민주주의의 미래를 불안하게 보지만 시덴탑은 미국의 연방주의에서 그 가능성을 찾는다.

다시 말하자면, 시덴탑은 자발적 결사나 지방의 자율성이 사라지는 상황에서 18세기의 미국 연방주의가 보여주는 지방자치의 전통과 공통의 언어, 열려 있는 정치 계급, 공유된 도덕적 신념 등을 기반으로 자유주의적 헌정주의를 구현함으로써 유럽의 정치적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입장은 이른바 엘리트 기획으로서 외부에서 주입된 유럽 통합 초기 단계의 국가주의적 지름길이 갖는 한계를 지적하고 규범적 의미에서 올바른 정치적 공동체 형성의 길을 제안하는 것이다. 규범적 관점에서 정치 공동체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소는 시민의 존재이다. 두 번째 단계는 이 시민들의 의사를 종합하여 그들이 꿈꾸는 공동체의 청사진, 즉 헌법을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이 청사진에 근거해 각종 국가기구와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다.

그러나 유럽연합은 이와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 왔다. 즉, 엘리트의 기획에 의해 외부에서 통합을 견인해 나갈 제도를 먼저 만들었고, 그 다음에 헌법을 만들었으며, 마지막으로 이 모든 정책 결정을 정당화시켜줄 시민을 만들어 내고자 한다. 이처럼 규범적 관점의 정치 공동체 구성 순서를 거꾸로 밟아 가는 것을 국가주의적 지름길이라고 부를 수 있다. 국가주의적 지름길은 빠른 의사 결정과 효율성을 장점으로 한다. 유럽연합은 공동의 경제 이익과 경제적 혜택을 바탕으로 지난 60여 년 동안 놀라운 속도의 발전을 보여 왔다. 그러나 점점 심화된 통합의 수준은 궁극적으로 이 모든 과정을 정당화시켜줄 시민의 존재를 필요로 하

는 단계에 이르고 있다. 만약 시덴탐에게 현재의 위기에서 유럽연합이 선택해야 할 길을 묻는다면, 그는 당연히 유럽시민들에게 결정하게 하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리스의 정책 실패에 대한 독일 시민들의 비난에서 볼 수 있듯이 유럽의 정체성을 공유하면서 동료 시민들의 불행에 공동의 책임을 느낄 정도의 연대감을 갖는 유럽 시민들의 존재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사실이다.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자. 유럽연합은 와해될 것인가? 또는 현재의 위기 상황에서 유럽연합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 것인가? 지금까지 살펴본 네 권의 책은 서로 다른 길을 제시하고 있다. 모네는 아마도 재정 통합까지를 포함한 더 깊은 통합의 진전을 대안으로 제시할 것이다. 초국가 수준의 이성의 기획과 국가 간 협력의 제도화를 통해 신자유주의적 지구화가 가져오는 경제적 부정성을 통제해야 한다고 말할 것이다. 그것이 근대적 프로젝트로서 유럽연합의 승리를 보장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충고할 것이다. 지에론카는 신중세 제국으로서 유럽연합의 이상을 제시하면서 회원국 간 차이를 존중해야 하고 따라서 통합으로부터의 후퇴가 불가피하다고 말할 것이다. 수평적이고 다원적인 거버넌스에 맞게 새로운 민주주의를 모색해야 하고 극단적으로 위계적인 웨스트팔리아 체제의 재생산을 시도하는 것은 옳은 해결책이 아니라고 주장할 것이다. 모라브칙은 어차피 유럽연합의 현재 수준은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 주요 국가가 자신들의 국가 이익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선택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의 결과이기 때문에 큰 환상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말할 것이다. 각국의 이익이 수렴된다면 유럽연합은 유지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후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시덴탐은 무엇보다도 유럽의 시민들에게 물어보라고 대답할 가능성이 높다. 만약 질문에 대답할 유럽 시민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는 지금부터 천천히 유럽 시민들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결국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유럽연합의 와해 가능성은 유럽 통합의 끝이 단일 거대 정부의 구축일 것이라는 견해를 전제로 한 것이다. 역사상 모든 제국의 물리적 경계는 모호했다. 유럽연합이 다양한 국민국가들 사이의 경쟁과 협력 속에서 수평적이고 다원적인 통치 체제를 지향한다면 유럽연합의 와해라는 말은 애초에 성립되지 않는다. 그 통합의 속도와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자신들이 속한 정치 공동체의 운명을 결정하기 위해 자발적인 참여와 충분한

연대감을 갖고 나서는 유럽 시민들일 것이다. 즉, 이 질문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대답은 시넨답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유럽 시민은 아직 존재하기 않거나 그리스의 실패를 책임지고 나의 희생을 감수할 만큼의 연대감을 갖지 않는다. 바꿔 말하자면 현재의 위기 상황에서 모든 정책 결정을 정당화시켜줄 최종적인 근거로서 시민의 존재 여부는 모호하다. 그렇다면 결국 문제는 다시 민주주의인 것이다.

투고일: 2011년 12월 16일 | 게재확정일: 2011년 12월 19일